

누구나 참여 가능한 생활체육·장애인체육 활성화

광주 체육정책 비전·발전 전략 '5개년 계획' 용역 보고회

초중고·실업 연결 훈련생태 구축, 체육행정 조직 개편 등 담겨

앞으로 5년간 광주의 체육정책 비전과 발전 전략을 담은 체육진흥 5개년 로드맵이 마련됐다.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맞춤형 생활체육모델 발굴 및 적용, 초중고·실업으로 연결되는 훈련생태 구축, 장애인 체육 활성화, 체육행정조직 개편, 운동부 지도자 처우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광주시는 8일 광주시체육회관에서 관련 공무원과 체육인,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진흥에 관한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등을 위한 '광주체육진흥 5개년 계획'의 수립관련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체육진흥 5개년 계획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2018년 11월부터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중간보고회,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핵심내용으로는 ▲초·중·고·실업으로 이어지는 최적의 훈련생태 구축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생활체육모델 제시 ▲학생들의 스포츠 참여 확대를 위한 선진국형 체육시스템 구축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설·인력·프로그램 확대

▲신규체육시설 확대와 기존 체육시설 운용효율성 극대화 ▲스포츠관객층을 활용한 경제효과 극대화 및 신성장 도시전략산업 육성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체육행정 조직 개편 및 시민참여확대 ▲소의계층 체육참여 유도 및 운동부지도자 처우개선 등이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주요 공공체육시설의 서구중심 클러스터화 및 타포를 위한 제2의 스포츠클러스터 계획수립 ▲광주체육지수 개발로 광주 체육환경의 강점과 약점 파악 및 보완방법 개발 ▲스포츠산업의 중합발전계획 수립필요 ▲학생전문체육 감소에 따른 육성시스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등 국제메

가이벤트 유무형자산을 활용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전남도와 함께 2040년 이후 아시안게임을 유치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광주시는 향후 시민이 공감하는 체육정책 마련 및 체육시설 확충, 스포츠산업육성 등에 대한 기본계획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박항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이번 5개년 계획 수립으로 광주가 문화스포츠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며 "국제대회 레거시(유산)사업추진과 함께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정보통신기술(IT)을 접목한 e스포츠·다양한 레저스포츠 활성화, 국제스포츠마케팅 및 스포츠산업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문제 많은데...답 없는 '학생 안전'

전남도의원, 교육청 잇단 질책 학생 이용 수영장 턱없이 부족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전남도의회 의원들도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되는 필수항목임에도, 재정 형편 등을 들어 변화를 찾기 쉽지 않을 정도로 반복되는 데 따른 난맥상을 질책했다.

◇생존수영에 적합한 수영장 어디? = 조광영(민주·해남 2) 전남도의회 의원은 9일 열악한 시설 때문에 정부의 수영 교육 강화 방침에 따라 진행되는 '생존수영'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22개 시군 중 신안·함평의 경우 지자체·교육청이 운영하는 수영장이 전혀 없어 해당 지역 학생들에 대한 생존수영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전남도교육청이 보유한 수영장도 여수 학생교육문화회관과 곡성 교육문화회관 등 8곳에 불과해 전남지역 9만 4000여명의 초등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조 의원은 "생존수영 교육을 위해 수영

장을 갖춘 지역으로 이동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할 뿐 아니라 수영장 보유한 지역에서도 인구 대비 수영장 시설이 부족해 교육 예약 시간을 잡기도 힘든 형편"이라고 비판했다. 그나마 세월호참사이후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 따라 최근 개원한 안전체험학습장마저도 생존수영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특수학교 학생들, 화재 대응 대책은? = 김경자(민주·비례)전남도의회 의원은 최근 도 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전남지역 8개 특수학교에는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에 도움이 되는 스프링클러가 전혀 설치되지 않았다"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수학교 학생들의 경우 화재에 취약한데도 일반 학교와 같은 스프링클러 시설 기준(4층 이상 건물·바닥면적 1000㎡ 이상)을 적용하고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전남지역 8개 특수학교 중 해당 기준에 해당하는 곳이 없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때문에 특수학교 학생들의 상황을 감안,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수영대회 전야제 11일

금남로 차량 통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전야제가 열리는 11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금남로와 서석로 일부 구간에 차량 진입이 통제된다.

전야제는 문화공연과 시민 체험프로그램, MBC 축하콘서트 등에 1만여 명이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교통혼잡상황을 설치, 운영하고 시·구 공무원, 자원봉사자(모범운전자) 등을 투입해 교통혼잡과 안전에 대응키로 했다.

행사장 주변 교통소통·통제는 광주동부경찰이 담당한다. 광주시와 동구청 공무원, 모범운전자회는 행사장 주변에 별도 배치돼 교통안전과 질서유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관람객의 주차편의를 위해 중앙초등학교와 서석초등학교, 동구청 등에 650명 규모의 임시주차장을 별도 운영한다.

금남로(금남공원-전일빌딩)와 서석로(충장로1가 입구-문화전당 예술극장앞) 일부구간이 통제됨에 따라 문화전당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18개 노선을 중앙로와 제봉로로 우회된다.

전야제가 종료되는 밤 9시30분께 시내버스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행사장 주변 32개 전 노선의 시내버스를 증차할 계획이다.

행사장 주변 간선도로와 진출입로의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계도와 단속을 하고, 광주교통방송(TBN) 등을 통해 행사장 주변 도로운영과 교통통제 상황 등을 실시간 제공할 예정이다.

임시주차장과 시내버스 우회 및 증회 운행 등 이번 교통대책에 대한 정보는 시와 수영대회 조직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수영대회 주 경기장 점검

이용섭 광주시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오후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주경기장인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을 방문해 대회 대비 점검 및 생물테러 대응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지역현안사업, 지역업체 참여·지역민 고용 방안 마련을”

이용섭 광주시장 간부회의서 지시

이용섭 광주시장은 9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지역사업 추진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함께 마련하라"고 관련부서에 지시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민선 7기 들어 해묵은 과제들을 해결해왔고 그 성과로 올 하반기부터 지역발전을 견인해갈 대규모 현안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광주형 자동차공장 건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등 연내 착공 예정인 굵직한 사업들을 열

거하면서 지역업체 참여·지역민 고용·지역 건설자재 및 장비 사용 최대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담당 실국에 지시했다.

이른바 열세막은 하마로 불리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 개선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이 시장은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금이 2007년 196억원에서 2018년 639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시내버스 서비스는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평가"라며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 시(市)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파 사주기 운동에 공직자가 앞장 서자는 당부도 했다.

이 시장은 "양파 가격이 평년 대비 40% 이상 폭락했다고 한다"면서 "상생의 첫걸음은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으로 생각한다. 양파 소비에 동참하자"고 말했다. 광주군공항 이전사업·혁신도시 공동기금 조성·SRF(고형폐기물 연료)발전소가동 중단 등 주요 현안을 두고 시·도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가운데 광주 공직자들이 양파 주산지인 무안 농민들을 돕자는 취지의 당부로 임혀진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생활 속 안전 불감증' 여전

전남도소방본부 화재안전 조사 다중이용시설 60% '불량' 판정

'학생 안전'만 불안한 게 아니다. 지역 사회 곳곳에서도 '관찰됐다' 하는 안일함과 '별일 없겠지'라는 근거없는 낙관주의에 기댄 채 생활하는 '일상 속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 정부의 안전 대책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해수욕장 안전 대책 지원엔 '인색' = 전남도는 최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열린 '40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 '해수욕장 안전관리인력(해경) 상주 지원'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연안해역 사고·안전 관리에 주력하기 위해 기존 해수욕장에 상주토록 했던 전문 인력을 철수시켰다.

전남도는 해수욕장 안전 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과 이용객 통제와 전문 안전관리자 확보의 어려움 등을 들어 해경의 상주를 건의했었다. 전문성이 미흡한 지자체가 해수욕장 안전 관리를 맡는 데 따라 자칫 이용객 안전 사고 발생 시 대처 능력에 한계를 보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여전한 일상 속 '안전 불감증' = 불량 소화기와 자동화재탐지기, 적재물이 쌓인 방화구획 등 화재 위험이 방치된 다중이용시설이 전남에서만 9378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 속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질서 의식을 생활화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전남도소방본부가 지난해 7월부터 전남 지역 다중이용시설 중 1만5614곳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60%에 달하는 9378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소화기구 불량(4833곳), 유도등 불량(4122곳), 자동화재탐지기 불량(3953곳) 등 소방 분야가 42%로 가장 많았고 건축 분야에서 무단증축이나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 건축물(2189곳), 방화문 및 방화구획 불량(1522곳) 등 31%가 '불량' 판정을 받았다.

누전차단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866곳) 가스누출차단장치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579곳) 등 전기(14%), 가스(13%) 분야에서 지적을 받은 곳도 적지 않았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잠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362-3336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전원주택 매매

신축건물 전남 무안군 운남면 내리 190-1, 190-6, 190-7

유명한 풍수가 추천해준 곳, 수맥이 전혀 흐르지 않은 명당 중에 명당 이며 선착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거실에서 바다가 훤히 보이는 조망권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 190-6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7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1번지면적 : 660㎡, 건평 : 83㎡, 매매가 : 1억7천5백만원

☎ 010-4061-7200